

이 대통령 ‘숙의’에 멈춘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공방 격화

민주, 특검법 ‘지선 후 처리’ 검토
국힘 “李 정권, 온갖 폭탄 다 미뤄”
야권, 결의문 등 공동 대응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결집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언급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특검법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행보를 본격화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선거 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고민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방문 이후 “어제(4일)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조작기소 국정조사’ 종료 직후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두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졌고, 당내에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혐지로 꼽히는 영남권에서는 중앙의 부정적 이슈가 지역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지선 이후 처리를 요청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법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숙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숙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라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 보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선 뒤로 다 미뤘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지선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홍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고 적었다.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가세했다. 오세훈서울시장 후보·유정복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법안의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세훈·유정복·양향자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조승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연석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국힘 부산 북갑에 박민식… 단일화는 일축

민주 하정우·무소속 한동훈 ‘3파전’
보수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될 듯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다. 이로써 부산 북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박 후보는 이영풍 전 KBS 기자와 경선을 치렀다.

박민식 전 장관은 지난 18~19대 총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에서 이곳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20~21대 총선에서는 전제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2승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이에 이번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박 후보와 민주당 소속 하정우 후보,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와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는 부산 북갑 탈환을 위해선 보수진영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모두 출마하면 표가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일축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도 후보 확정 직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며 “주요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단일화, 무공천이다, 연대론이다’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히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단일화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당정, 오늘 ‘형사사법 체계 변화’ 토론회

당·정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해 토론회를 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오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선 공동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완 수사 요구 원칙 아래에 검·경 협력 증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추진단장이 참석하며, 토론에는 좌장인 한상

희 교수, 발제자인 윤승익 교수, 토론자인 윤동호 교수, 김필성 변호사, 최호진 교수,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보완수사권을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청와대에 핀 웃음꽃…李, 어린이들과 소통

어린이날 맞아 200명 초청

꿈·진로에 대한 대화 나누고
놀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0여명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어서 와, 청와대는 처음이지?’라는 이름 하에 열렸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처음 열린 어린이날 행사이기도 하다.

초청 대상은 인구소멸지역 거주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 한부모·다문화 가정 어린이, 장애·희귀질환 어린이, 청와대 인근 거주 어린이 등 다양한 환경의 어린이들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과거 방문했던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이용 어린이, 그리고 지난해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했던 어린이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정부기관 홍보 캐릭터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맞이했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청와대 본관의 세종실과 충무실이 개방됐다. 세종실은 국무회의가 열리고, 충무실은 간담회, 임명식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다.

세종실에서 어린이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이곳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앉은 자리를 가리키며

“각자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고 말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국무회의는 언제 하나요?”, “어린이날은 왜 5월 5일인가요?”, “통일은 언제 되나요?”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손을 든 어린이들도 있었다. ‘청와대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도서관을 많이 짓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나왔다.

충무실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는지, ‘대통령 일은 편한지’ 등의 질문도 나왔다. 이어 녹지원에서 어린이들이 대통령 부부와 놀이를 이어가는 시간이 있었다. 녹지원은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일일 놀이공원으로 꾸며져 회전그네, 회전비행기,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와 컵케이크 만들기, 손 씻기 체험, 청와대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과 함께 키캡 만들기과 페이스 페인팅 체험에 참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요청에 따라 일일이 직접 사인을 해주며 “꿈을 이루세요”, “사랑합니다”, “훌륭한 아나운서가 될 것입니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도 “어린이들이 오늘의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 더 큰 꿈을 꾸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예진 기자